

“수사 대상·범위 등 조정 ... 독립성 확보할 견제장치 필요”

“공수처 설치 일관되게 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수처 설치 주장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해서 뿌리 뽑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해 전 관여 등 범조버리가 발생한 이후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를 환영한다. 다만 위원회 권고안은 기존 공수처 논의보다 규모와 권한이 커짐으로써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 뿐만 아니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를 차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검찰 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반드시 국회 통제 받아야”

박지원 법사위원



사법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 운영에는 회의적이다. 전 정권에서 운영한 특별 검찰관 제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운영됐다면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 8000명 정도 되지만 공수처는 실제로 검찰정보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 개혁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자체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인사 등을 매개로 청와대의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

“검찰개혁 대안 안된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 또 다른 사정 및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수사 기관의 경쟁은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사법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공수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다시 개혁을 한다고 제2의 공수처를 만들 것인가.

“국회 입법과정 보완 필요”

천정배 전 법무장관



공수처 설립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 안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국회 입법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권고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아닌 국회의 임명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 시스템을 뒤야 한다. 가령 공수처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주요 사건의 수사나 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와 통제를 받도록 해 정치 편향을 방지해야 한다. 공수처가 사법 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무소불위 권력 갖는건 막아야”

이용주 법사위원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공수처장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또 공수처와 검찰간의 연결고리를 차단, 독립성을 강화하고 처장과 차장은 퇴직 이후, 2년 동안 정부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개한 공수처 권고안은 기존 논의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 안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인정되면 공수처를 하도록 함으로써 ‘바주기 수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의원들 ‘슈퍼 공수처’ 우려

민주 이개호 찬성·무소속 이정현 ‘부정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반응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권고안에 대해 대부분 “설치엔 찬성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직 규모가 크고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이 너무 광범위해 ‘슈퍼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처장 인사권 등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정부 차원의 공수처 설치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치 문제는 사법 개혁의 선후가 뒤바뀔 것 같다. 우선 검찰과 법원의 자체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에 공수처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대선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권고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 파견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공수처 신설엔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

명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여야 합의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독립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석(광주 서구을)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만들자는 대안 기관인데 거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를 너무 확대하면 안되고, 수사대상 범위 축소와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또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독립성 확보 문제와 공수처 견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해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했다”며 “하지만, 고위 공직자 수사는 기존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부장급 이상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권력과 되면서 공수처 신설 요구가 나왔지만,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부패 등을 수사하도록 하거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검찰의 견제 장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승용(여수시 을)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잘 살펴야 한다”면서 “우선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수사대상 등을 한정 짓는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 독립성 확보방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수처장 등에 대한 임명 절차의 중립성, 현직 검사 숫자와 공수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찬성한다. 하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검찰과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면서 “처장 인사권에 대한 여야 추천 등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찬성한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 문제와 함께 검경 수사권 독립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검·경, 그리고 공수처는 현재로서는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이 청와대 밖에 없지만,

권력에 예속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견제 장치와 기능이 필요하고 정부 법안 내용 중 대상 범죄 유형과 고위공직자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과 통제가 최대의 관건이다”면서 “따라서 청와대로부터의 예산·인사 업무가 독립이 되어야 하며, 국회 의결을 통해 수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국민의당은 물론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런 점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안의 경우 기존 논의보다 규모와 권한이 커짐

으로써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애초 ‘무응답’이란 입장을 보였다가 곧바로 스마트폰 문자로 ‘부정적’이란 입장을 보내왔다.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함평·영광)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법안에 대해 전면 찬성이다”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당론이다. 저의 생각도 당론과 같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